□o□□□ □□o□□

나 침 반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반 부 패 개 혁 으 로 청 렴 한 국 실 현

국민권익

2018 SPRING
Vol.56
□□R□ NEWS□E□□ER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살피겠습니다.

목차

국민권익

발행일 2018년 3월 15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박은정
편집인 한삼석
주소 [illegible]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기획/디자인/제작 더에이치 [illegible]

페이스북
[illegible]

트위터
[illegible]

블로그
[illegible]

유튜브
[illegible]

Cover story
나침반

국민이 중심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갑니다.
〈국민권익〉 봄호에서는
반부패 · 청렴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Special Theme

04 **포커스 1**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06 **포커스 2**
제6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10 **ACRC 뉴스**

12 **세계속의 ACRC**

청렴, 하다

14 **시대인터뷰**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18 **글로벌 리포트**
청렴국가로 가는 길

22 **브레이브 하트**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교사

26 **정책공감**
2018 청백리포터 발대식

공감, 나누다

28 **ACRC가 간다**
하동군 영당마을 현장 조정회의

32 **카드로 보는 국민권익**
고충민원 · 제도개선

36 **부서탐방**
청렴조사평가과

40 **기업신문고**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오감, 열다

42 **청렴한 여행**
지난 자리마다 청렴정신,
충청도의 청백리 흔적을 뒤따르다

48 **건강보감**
젊은 나이 불쑥, 나이들면 만성 '동결견'

50 **시크릿 팁**
이것만 알아두면 나도 짠테크族!

52 **독자마당**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가즈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촛불민심을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의 열망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였던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답게 국민들과의 소통,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화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계획을 소개합니다.

#1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반부패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종합적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반부패정책의 범정부적 총괄 및 조정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합니다.

효과적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법령을 보완하고 더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부정환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내부고발자'는 대한민국이 더욱 청렴한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초석입니다. 이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보상과 포상도 확대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

민간부패에 대한 개선노력 확대

우리나라에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민간부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최근 문화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미투 운동' 또한 이러한 부패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저해하는 일련의 공익침해행위를 제거하고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의 부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국가청렴 이미지 제고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CPI)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평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취약분야 및 기관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강화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강화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스터디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중점 해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주요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국민고충의 실질적인 해소를 가져오겠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벽지 주민의 민원 상담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 적극 개선

기업의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은 현장 중심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로 인한 중소기업 고충민원을 종합처방하고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는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군, 검찰, 경찰은 오랫동안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국민권익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검찰과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그리고 군장병을 위하여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활동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집단민원에 대한 현장조정은 보다 체계화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 강화

적극적 민원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민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빈발하고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제안/토론 활성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많은 국민의 관심 사안을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생각을 숙성시키는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국민생각함 등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실제 국민 여러분이 정책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 개선 지원

국민권익위의 특별한 민원동향 파악 장치로 '민원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또한 '국민의 소리 맵'을 구축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더 많은 이들이 민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부패예방/고충해소 제도개선

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의 4대 중점분야에 대한 개선이 시행됩니다. 기업의 비리가 국제평가지수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방만경영, 채용비리 문제가 있는 공기업들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비리 발생 소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일자리, 복지 등 민생예산의 누수를 막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 제도개선의 각 추진 단계별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의견수렴은 정례화되며,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제도개선의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관별로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이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권고 후 3~5년이 경과한 장기 미이행 과제를 재검토해 국회에 제안하거나 재권고 하는 등 그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글 노경희 | 사진 주효상

'제6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2월 27일 오후2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곁들인 '국민 참여마당' 형식으로 진행되어 호응을 얻었다.

제6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국민 참여마당' 형식으로 진행 12개 단체 99명 유공자에 포상

세종시민 등 300명 참석해 '국민 참여마당' 즐겨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예정된 장내는 기대 가득한 유공자와 가족,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춘희 세종시장,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 등 내빈도 밝은 표정으로 함께 했다.

권태성 사무처장은 기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로, 국민권익위는 조선시대 신문고 정신을 계승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더욱 실용적인 국민권익 보호 정책을 펼쳐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고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간 청렴문화를 전파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시

국민권익의 날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1402. 2. 27)이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에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해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고 2013년부터는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행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적응을 하는 데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공직자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부패에 앞장서는 데 세종시도 적극 협조하겠다.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렴문화에 힘쓴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권익위원장 표창

기념식에서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훈장 1점, 포장 1점을 포함해 총 12개 단체, 99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1점, 권익위원장 표창 70점을 수여했다.

분야별 수상자를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공익신고자 김광호 씨가 있다. 김광호 씨는 재직 중인 회사 내부의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했고 국토부가 제조사의 자동차 결함에 대해 조사하여 강제리콜 명령을 하게 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대용 감사실장은 각종 신고시스템 및 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맞춤형·테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고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는 '더 청렴한 사회, 더 신뢰받는 정부,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마형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공헌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농촌진흥청 이상준 서기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 서기관은 현장 중심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농업기술 현장지원단」, 「행복농업 이동상담장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상남도 창녕군 윤지영 주무관은 고충민원 전담반 및 TF팀을 구성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 총 16개의 온·오프라인의 신고채널을 다양하게 확대 구축해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심판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허지영 주무관은 대량의 다양한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심판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권익'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 호응

이날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국민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세종시 직능·사회단체 관계자와 축산·화훼·외식업 등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단체까지 초청 범위를 늘렸다. 또 '국민권익의 날'을 애민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사'로 꾸미기 위해 각종 공연과 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목 받았다.

행사의 문을 연 공연은 극단 '바닥소리'의 판소리뮤지컬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공익신고를 주제로 한 참신한 내용을 판소리 뮤지컬로 풀어내 참석자들에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진행된 공연은 세종시 나래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꿈나래합창단'의 합창공연이었다. 합창단은 '고향의 봄' 등 흥겨운 노래선율로 행사에 흥을 더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에 대한 대학생, 학부모, 공익신고자 등의 칭찬과 바람을 담은 '국민의 소리' 영상을 상영해 국민권익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더 청렴한 사회, 더 신뢰받는 정부,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해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 실질적 국민권익보호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R⊠ ⊠E⊠⊠⊠INE NEWS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4대 Free' 아젠다 수립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부정청탁 Free, 봐주기 Free, 민관유착 Free, 눈먼 돈 Free'의 「청렴정책 4대 Free」 아젠다를 기반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지만 채용비리,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복지보조금 횡령 등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청탁관행, 봐주기 관행, 민관유착 관행, 눈먼 돈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청렴한국을 실현하자"고 각급 공공기관 참석자에게 당부하였다.

- **부정청탁 Free** 인사, 인·허가, 검사 등 청탁빈발 분야별 부정청탁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
- **봐 주 기 Free**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각급 기관 징계기준과 절차 공개,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개선
- **민관유착 Free** 국방, 철도, 해운과 같은 폐쇄지역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등 민관유착 빈발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 **눈 먼 돈 Free** 의료,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제도개선 추진 및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공식 출범
부회장에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선임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지난 1월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부회장으로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길준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등도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머리 맞대

서울포스트타워에서 공개토론회 열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2월 21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 내부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 71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를 측정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기준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지난해에는 7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 이라며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은 현재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설 앞두고 이웃 찾아 명절인사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 및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들에 설인사를 전했다.

이날 먼저 산성시장을 방문한 권태성 사무처장은 상인들이 건넨 떡 등을 먹으면서 덕담을 나눴다. 이후 소망의 집 등 복지시설을 찾아 시설 이용자 및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권태성 사무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을 직접 찾아 인사를 나누고 사는 이야기를 듣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편집실

⊠⊠R⊠ G⊠⊠⊠⊠ NEWS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한-호주 손 잡다

한-호주 연방옴부즈만 협력 MOU 이행 정책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호주의 옴부즈만 기구와 전자정부 기관을 찾아 한국의 고충민원처리제도 및 국민신문고를 알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간 호주 캔버라와 시드니에서 한-호주 옴부즈만 MOU 이행 관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호주, 한국 차세대 신문고 시스템에 관심

국민권익위는 12월 5일 호주 방문 첫 일정으로 호주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정부국(Digital Transformation Agency)과 온라인 국민 참여 관련 협력회의를 열고 시민참여 확대 및 국민권익 관련 전자정부 시스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호주 관계자는 "한국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주력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6일에는 호주연방옴부즈만 사무소에서 한-호주 협력 MOU 이행 회의를 열고 ▲호주 연방 옴부즈만의 역할 및 기능 소개 ▲호주의 고충민원처리 시스템(Resolve)[1] 소개 ▲호주의 국방민원, 국가적 사회보장제도 및 감사 등 소개 ▲한국의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소개 ▲한-호주 간 옴부즈만 협력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1
호주 고충민원처리 시스템(Resolve)이란
호주연방옴부즈만에서 사용하는 고충민원의 접수와 처리 시스템으로, 연방옴부즈만은 외교, 국방,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이 연방정부 기관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모바일, PC로 이름, 성별, 주소, 전자우편 등 민원인의 기본정보와 민원기관, 민원내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 호주 연방옴부즈만과 양국 재외국민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재외국민이 제기한 민원 우선처리,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과 회신이 가능한 번역서비스 제공, 상대국 재외국민 고충처리 현황 정보의 정례적 교환 등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양국의 민원처리 정책과 제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권익보호와 옴부즈만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호주 거주 기업인 만나 민원고충 청취·해결도

이 밖에도 일정동안 국민권익위는 ▲재외공관에서 국민신문고 이용 관련 불편 및 개선사항 논의 ▲NSW(New South Wales) 주 옴부즈만 방문 ▲재호주 한국기업인 기업고충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7일에 열린 재호주 한국기업인 고충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호주에서 조세나 특허 등의 사업 관련 제도 또는 수도요금 등의 생활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세청, 특허청 등의 부처에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사관이 관련 정보 안내 및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호주 옴부즈만 정책 상호발전 협력에 최선

국민권익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민원처리시스템 비교분석과 도입 가능성 검토 ▲NSW 주 옴부즈만과 협력방안 강구 ▲NSW 주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매뉴얼 활용방안 검토 ▲국민신문고 등 전자정부시스템의 공유 및 협력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양국의 옴부즈만 정책과 제도의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와 옴부즈만 제도 발전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 노경희 | 사진. 김오늘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ACRC INTERVIEW

2018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렴'은 어떤 모습일까.
<국민권익>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 '청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봤다.
같은 세상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전하는 '2018년 청렴한 세상을 향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나의 실천 다짐'의 목소리를 사진과 함께 담았다.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한지 벌써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세무, 농업, 감사, 토지주택, 주민민원 정말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청렴'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실천하려 노력했지요. 요즘 TV를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부정부패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고요. 하도 큰 액수의 금품수수 뉴스를 접해서인지,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은 "작은 금액 쯤이야", "이정도 쯤이야"라며 작은 액수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니라고 여기는 듯해요. 그러나 부정하게 오가는 일이라면 단 10원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며 온 몸으로 느껴온 이러한 소신을 제 가족과 주변 이웃에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 국민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청렴'. 2018년엔 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청렴'에 대해 늘 고민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청렴'.
2018년엔 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국민권익위원회가 맨 앞에 서주길 바라요.

학창시절 공부를 할 때에는 그다지 관심갖지 않았던 '반부패'나 '청렴'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국민 스스로 촛불을 밝히고 거리로 나온 것도 미디어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느라 바쁜 마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광화문, 촛불을 든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당시 온 국민의 마음은 하나였을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국민의 꿈의 맨 앞에 서주길 바라요.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각지대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 역시 국민이 바라는 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청렴정신 계승·실천

우리 위인들의 청렴정신을 계승·실천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기심 문화가 팽배합니다. 대가족 사회에서 존재했던 밥상머리 교육 부재와 초·중등 과정의 예·체능교육 부재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은 경쟁심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심 같은 부정적 인성만 더욱 부채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 기성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특히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은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생각과 사리사욕(私利私慾)을 버리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청렴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우리 위인들의 청렴정신을 계승·실천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글. 하인회 주간한국 기자

청렴국가로 가는 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가 180개국 가운데 51위(54점)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점수 및 순위 모두 각 1단계씩 오른 결과다. 한국TI는 "2018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부패문제인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사회고위층의 구조적이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부패를 막고 무너진 국가 반부패·청렴 시스템을 세워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반부패·청렴으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해외의 성공적인 반부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싱가포르는 84점을 얻어 180개국 중 6위에 올랐으며, 홍콩은 77점으로 13위에 올랐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수십 년 전부터 공수처와 같은 부패조사기관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유교문화권에 단기간의 경제 성장 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이들 나라는 어떻게 부패를 몰아냈을까.

아시아 최고 부패청정국, 싱가포르

부패조사기관이 먼저 설치된 나라는 싱가포르다. 1959년 초대 총리에 오른 리콴유(李光耀)는 "싱가포르에서 부패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이듬해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그가 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싱가포르를 신뢰받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

이후 그는 식민 통치 시절인 1952년 영국이 말단 경찰과 경찰의 중간 간부, 노점상 단속반과 토지 관리인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세운 기관이었던 탐오조사국(Corruption Prevention Investigation Bureau, CPIB)의 권한을 확대 · 강화시켰다.

탐오조사국의 수장은 국가원수가 임명한다. 조사범위는 공직의 부정행위뿐만 아닌 민간부분의 부정행위로 폭넓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싱가포르 CPIB 본부 전경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수십 년 전부터 공수처와 같은 부패조사기관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포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자의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권한도 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100만원) 벌금 및 불법 취득한 부동산과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100% 환불 못하는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도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간주해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이다.
탐오조사국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콴유 총리가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87년 리콴유 총리의 친구 치엥완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탐오조사국에 적발됐을 때, 총리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치엥완이 자살하자 미망인은 총리에게 부검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총리는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부탁을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싱가포르 CPIB를 상징하는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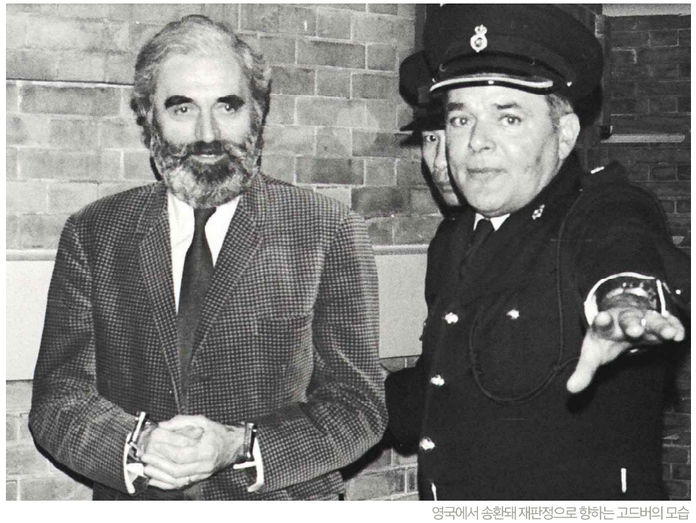
싱가포르 전경

1959년 초대 총리에 오른
리콴유(李光耀)는
"싱가포르에서 부패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이듬해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부패조사기관에 가장 강력한 권한 부여,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부패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홍콩의 1960~70년대 모습은 현재와 달랐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사회 전체의 부정부패는 만연한 상태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는 심각했다. 경찰이 폭력, 도박, 마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받는 것은 다반사였고 응급구조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심지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물을 줄 때도 뒷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콩의 부패조사기관인 염정공서(ICAC) 탄생을 촉발시킨 인물은 영국 출신 최고위 경찰 피터 고드버였다. 1973년 고드버는 437만 홍콩 달러를 횡령해 영국으로 달아났다. 이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6개월간 거리 시위에 나서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당국은 결국 이듬해 염정공서법, 뇌물방지법,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방지법 등 이른바 부패방지 삼륜법을 바탕으로 염정공서를 설치했다. 이후 고드버는 홍콩으로 송환돼 4년 동안 감옥에서 쇳값을 치렀다.
염정공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집행처와 부패방지처(부패 예방), 대민관계처(반부패 교육) 등 3개 집행부처와 지원 부서인 1개 행정총부로 구성돼있다. 집행처는 부패혐의자에 대한 조사권, 조사 위한 문서열람권, 금융계좌추적권이 있으며 부패혐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및 48시간 내 구금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염정공서는 직무 수행에 있어 '이익'을 바라고 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직뿐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 봉급 수준을 상회하는 생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염정공서 요원은 독자적 판단 혹은 신고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경영자 동의가 있으면 민간 기업 배임 행위도 수사한다.
염정공서의 최대 치적은 '캐리언 사건'이다. 1987년 캐리언 투자사 실무 책임자인 샨수딘 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됐다. 수사 진행 2년 후, 홍콩 재계 거물이자 이 회사의 총책임자인 론더 사장의 연루 혐의가 포착됐으나 진전이 없었다. 회사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은폐했기 때문.
염정공서는 포기하지 않고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이어갔고 결국 2000년 론더 사장의 혐의를 입증했다. 14년간의 추적 끝에 나온 결실이었다. 이 사건은 '세계 최장기 부패조사'로 기네스북에도 기록됐다. 론더 사장은 결국 재판에 회부돼 징역 27년형과 미화 1,600만 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은 청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청렴한 국가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계속해서 부패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청렴국가로 가느냐,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계속해서 부패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청렴국가로 가느냐,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영국에서 송환돼 재판정으로 향하는 고드버의 모습

고드버 송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글. 노경희 | 사진. 김상재

복직 첫 날 제자들 만나던 설레는 마음 평생 가져갈 기분좋은 기억이죠

여기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있다. 곧 오십을 앞둔 25년차 국어교사다. 재직하던 학교의 비리를 폭로해 해임되었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3월 복직했다. 언뜻 그간의 삶에 지친 깐깐한 인상을 상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해맑은 웃음을 간직한 소년같은 모습이었다. 하나고 전경원 교사(48)다.

새로운 학교를 세웠으니, 새롭고 본받을 만한 고등학교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

Jun Kyong won

새로운 고등학교 모델 만들고 싶어 하나고 지원

좀처럼 추운 기운이 가시지 않던 겨울의 끝자락, 김포에 자리한 그의 연구실에서 전경원 교사를 만났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쏟아질 듯 한 다양한 서적과 여러 종류의 표창 · 감사패였다. 그 중에 하나고에서 받은 감사패가 눈에 띈다. 날짜를 보니 2014년, 비리를 폭로하기 얼마 전이다. "학교에서 진학입시지도에 대한 공을 인정해 준 표창이에요. 학교와 일이 있다고 해서 학생을 교육하며 만든 추억과 사명감까지 없앨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사는 학교에서 감사패를 받을 만큼 특히 진학지도에 열정적이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입시제도를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2004년 서울 진명여고에서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양정고를 거쳐 건국대 입학사정관실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입시제도를 바꾸는데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과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그리워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고등학교였다.

전 교사는 2010년 하나고의 개교를 준비하며 "새로운 학교를 세웠으니, 우리나라의 새롭고 본받을 만한 고등학교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며 "그러나 개교 당시부터 분위기는 다른학교와는 많이 달랐다"고 회상했다

부당한 기업형 교육행정 입시위지 학생교육에 반기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였다. 전형적인 금융기업가다. 이 때문일까. 교사 처우 등 학교행정이 마치 기업처럼 흘러갔다.

"교원평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고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하나금융 시스템을 가져와 교사들을 서로 평가하라고 했어요. 서열을 매기고 성과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부장교사였던 그는 가장 많은 부서원을 줄 세워야 하는 입장이었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각자의 특성이 다른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단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학교는 방과 후 저녁식사 시간 전까지인 두 시간 동안 다양한 악기연주와 운동, 미술활동 등 취미를 즐기는 '1인2기' 교육도 막으려 했다.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문제집 한 권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하라"는 학교의 지시에 전 교사는 제일 먼저 항의했다.

지시에 따르지않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전 교사에게 당시 교장은 일종의 구두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특권층 자녀 학교폭력 은폐까지
"왜 가만히 있나"

특권층의 자녀가 문제가 되자 학교의 반응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있어서는 안될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지만 해당 학생들의 담임과 학년부장 등은 어쩔 줄 몰라하며 끙끙 앓았다. '학교'는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 내부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입수하고 알아보니 내용이나 폭력의 수위가 심각했다.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게 맞는 일인지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었다. 200명 밖에 되지 않는 전 교생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교사는 교직원 회의때 "징계위원회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 있던 교장과 교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결국 별다른 조사나 징계 없이 학생이 전학을 가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은폐와 다름 없었다.

서울시의회 특위 증인으로 나서
모든 사례 폭로

사실 이 외에도 하나고는 안팎으로 민원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다. 학교는 선발 과정에서 남녀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승유 이사장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하나은행장 시절에도 남녀차별을 이유로 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노조에 고발 기소 되기도 했었더군요. 다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이와 함께 교원에 대한 횡포, 불합리한 요구 등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회에서 하나고 특위를 열었다. 설립때부터 특혜를 준 권력형 비리도 연관됐다. 그때 생각지도 않게 신입생 입학전형 담당이었던 전 교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전 교사는 모든 걸 사실대로 증언했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자녀 등의 학교폭력 사건 은폐, 신입생 성적 조작, 각종 교권 탄압 사례를 밝혔다.

상상 이상의 탄압
개혁만 생각하며 버틴 시간들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나 작게 실릴까 생각했지만, 다음날부터 각종 신문과 방송에 첫 머리에 다뤄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고, 조사결과 증언이 사실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는 거의 풍비박산, 패닉상태가 되었다. 태풍의 눈에 선 전 교사는 폭로 이전과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었고, 탄압의 강도는 이전의 그것과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나선 데에 좌절하고
탄압에 위축되면
절대 개혁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있었다.

아예 달랐다. "수업을 하고 나면 학교는 아이들을 불러 무슨 말을 했는지 일일이 보고하게 했어요. 학부모들은 교무실까지 찾아와 '네가 교사냐'며 침묵시위까지 했죠. 최소한의 업무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지만, 학교나 동료 교사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당시가 8월 말이었으니 막 개학하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때였지만 담임을 맡은 반에서 물러나야 했다. 반 전체 학부모가 사인했다는 연서를 보여주면서 나가라고 하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하지만 전 교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나선 데에 좌절하고 탄압에 위축되면 절대 개혁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1년여 만인 2016년 10월 31일 공식 해임됐고 2017년 3월 복직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하나학원 측의 해임처분이 부당하고 절차상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김승유 이사장과 교장 교감은 모두 바뀌었다. 교권탄압에 힘을 실으며 학교측에 서서 공격하던 일부 교사와 행정실장 등도 물러났다.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시발점으로 한 '인적청산'이었다.

공익제보하면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회 되어야

힘든 시간을 돌고 돌아 전 교사는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인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제 자리를 찾기까지 주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익제보'라는 경험을 통해 달라진 정신적 지평과 이상(理想)에 다가간 느낌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떠들썩한 검찰 성추행 폭로같은 강력한 권력기관의 내부고발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고 움직이기 힘든 권력기관의 변화들이 반가운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가 바라는 건 공익제보자의 처우 개선이다. 그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하면 조직에서 이탈하고 실패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우를 받고 출세한다고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학생만 생각하는
가슴 뜨거운 교육자

한편,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학교의 개혁이다.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참고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등교하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도전 과제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제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이기 전에 교육자라는 점을 상기하게 한 대답이 나왔다.
"지난해 3월 복직한 첫 날 제자들을 만나는 설레고 긴장되던 기분좋은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교사로서의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청렴한 사회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8
청백리포터 발대식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정책활동 현장을 생동감 있는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블로그 기자단이 '2018 청백리포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들은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등 각종 현장활동 및 정책을 직접 취재해 비주얼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위원회 홍보에 기여하게 된다.

"청렴 정책 현장 생생하게 전달할거예요"

글 쓰는 일을 매우 좋아하고, 좋은 글을 쓰려면 읽는 이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백리포터는 타인을 위한 덕목을 기르고 청렴하고 투명한 글을 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모집공고를 보자마자 지원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위원회의 정책 현장 곳곳을 다니며 담은 생생한 모습을 책임감 있게 국민에게 전하는 청백리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최교빈(24, 대학생)

"지난해 활동한 친구가 적극 추천했어요"

지난해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한 친구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대식에 와 보니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였다는 생각에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고충민원 해결 사례, 위원회의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웹툰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윤진실(36, 프리랜서)

INTERVIEW

청백리포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관심 많던 위원회 일원이 되어 기뻐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권익을 지키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설레고 기대되네요. 특히 실생활에서 잘 몰라 피해를 보는 다양한 법률 관련 민원사례를 알리고 싶어요. 열심히 뛰고, 재미있게 활동하겠습니다!

권순민(24, 대학생)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와 2018년도 온라인 홍보를 함께할 '청백리포터'의 발대식이 열렸다.
청백리포터는 올 한해 동안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을 온라인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는 블로그 기자단의 이름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지어준 새 이름인 '청백리포터'로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공개모집,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3인의 청백리포터가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국민권익위 정책 기사 작성 ▲이동신문고 · 현장조정 · 간담회 등 각종 현장 취재 ▲비주얼 콘텐츠(카드뉴스 · 영상 · 웹툰 등) 제작 ▲기사 소재 발굴 및 온라인 홍보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 SNS 서포터즈,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6월과 12월에는 상 · 하반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활동 실적을 정리하고, 좋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한 해 동안 활발히 활동한 우수 청백리포터 2인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블로그 기자단의 이름을 새롭게 '청백리포터'로 바꾸면서 청렴정책 홍보에 더욱 집중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는 등 의미를 더했다"며 "전국 각 지역의 청백리포터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청렴 소식을 널리 알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리. 편집실

도로 넓히는 것도 좋지만…
“주민 안전하게 다닐 횡단보도 만들어주세요”

하동군 영당마을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설치 현장 조정회의

지난 1월 12일 경남 하동군의 국도 19호선 하동~화개간 도로공사 현장상황실에 20여 명의 어르신이 속속 모여 들었다. 모두 영당마을과 상덕마을에 사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이날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하동군 화개장터 주변 주민 안전을 위한 교차로 설치 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해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적극 호소했다. 지난해 8월 민원 발생부터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조정 합의안까지, 그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았다.

주민 174명 마음 모아
도로공사 안전시설 설치 민원 신청

하동 영당마을과 상덕마을은 섬진강과 화개장터를 잇는 주요 요충지역이다. 약 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화개장터에서 5일장이 열릴 때마다 관광객이 몰려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차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도로공사를 시작하며 또다른 민원이 발생했다. 공사중 통행로가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교차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동군청 역시 “영당2길 공사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섬진강변이나 화개장터로 가는 길이 단절되었다”며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차로같은 생활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예산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맞선 상황이었다.

급기야 지난해 8월 17일 영당마을 등 주민 174명은 국민권익위에 “국도19호선(하동~화개) 공사를 하면서 통행로가 단절되어 노약자 등이 통행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달 21일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11월부터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등 업무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11월 6일부터 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 권고를 시작했다. 그 결과 같은 달 13일 영당마을 주민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정안에 합의했다. 합의한 조정안은 ▲3m 폭 생활도로 설치 ▲일부 구간 중앙분리대 제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확정되었다.

영당마을 주민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정안에 합의했다. 합의한 조정안은 3m 폭 생활도로 설치, 일부 구간 중앙분리대 제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확정되었다.

주요 조정 합의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피신청인)

▲ 주민들이 화개장터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 옆으로 3m폭 생활도로 설치

▲ 주민과 관광객이 섬진강변 쪽으로 왕래하기 쉽도록 영당2길 일부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횡단보도 설치

▲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확보 후 시행

하동군(관계기관)

▲ 피신청인이 생활도로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행정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

입장차 줄인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합의점 도출

이에 국민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는 올 1월 12일 권태성 사무처장 및 윤상기 하동군수, 김점수 영당마을 이장, 김태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위의 조정 합의안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권태성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이번 현장 조정회의는 노약자 등이 통행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공통된 의견을 모아 170여 명에 달하는 주민의 마음이 담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영당마을 주변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점수 이장은 "마을 주변 도로가 좋아지는 것은 반갑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걱정에 마음을 모아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동군청의 이해와 도움으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매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태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과 윤상기 하동군수도 "이번에 합의한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는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위의 조정 합의안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현장조사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당사자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자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최되며, 위원회의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미혼모 순정 씨
"양육수당 소급지원 해주세요"

고충민원

CASE #1

아기 엄마라기엔 매우 앳되 보이는 모습의 이순정(22, 가명) 씨가 아이를 등에 업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아이의 양육수당을 출생일로 소급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녀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봤다.

1 순정 씨가 위원회를 찾은 사연

순정 씨는 혼전임신으로 2015년 9월 28일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를 출생하기 전 자녀의 친부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제기한 관련 소송을 이유로 출생신고가 늦어지고 말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나 지난 2017년 5월 8일 뒤늦게 출생신고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출생 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육 수당 소급지원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은 순정 씨.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명백한 사유가 있었던 그녀는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 순정 씨의 주장

순정 씨는 미혼모로 자녀 친부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사실혼을 부당파기 당하고 장기간의 민 · 형사 재판이 있었으며 현재도 소송 중이다.

자녀의 출생 시 친부와 재결합은 할 수 없었지만 자녀를 위하여 친부도 함께 출생신고에 올리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친부는 계속해서 자녀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2017년 4월 4일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하여 친자 사이임을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생신고에 아버지로 올리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같은해 5월 미혼모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3 기관의 주장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양육수당) 및 같은 법 제34조의4(비용지원의 산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는 신청주의에 속한 제도이다.

양육수당 소급지원은 아동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가능하며,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관계 법령은 어떨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조사 · 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5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자녀 친부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사실혼이 부당파기 되고, 출산 후에도 위 양자간 장기간 민 · 형사 사건 소송이 지속되어 온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자녀를 위하여 친부를 출생신고에 올리기를 희망하였으나, 친부는 자녀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출생신고에 친부 등록을 계속 거부하여 2017년 4월 4일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신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각종 규정과 양육수당 지원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 양육수당 소급 지원하라

"양육수당을 실제 태어난 날로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순정 씨와 자녀는
양육수당을 소급지원 받게 되었다.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결과가 좋아 매우 기뻐요."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 짓는 순정 씨에게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졸음 쫓으려 들어왔다 쾅!

졸음쉼터 안전시설 필요해요!

지난 2014년 5월 31일 호남선 순천방향 정우쉼터에서 과속진입한 차량이 정차차량과 추돌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명이나 CCTV가 부족해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졸음쉼터를 좀 더 안전하게 바꿀 수는 없을까.

CASE #2

제도개선

1

졸음쉼터란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비상주차 개념으로 설치한 시설.

운전자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과 화장실, 햇빛 방지용 파고라(지붕)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 · 제공한다.

2

전국 200여 개 설치, 졸음 사망자수 절반감소 '효과'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206개소가 설치되어 졸음쉼터 설치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 실시한 영향으로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설치 전에 비해 55% 감소('10년 40명→'15년 18명)하였으며, 93.1%의 이용자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3

그러나

졸음쉼터 이용관련 고객의 소리

국민생각함

▶"졸음쉼터 진입시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주차된 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요."

▶"졸음쉼터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무서워요. 야간에 너무 어둡잖아요. 낮에는 화장실 때문에 이용하더라도 밤에는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를 못내겠어요."

▶"남자들은 화장실이 없어도 급한대로 용무를 보지만, 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더군다나 고령자는 더 참기 어려워요."

국민신문고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 본선 진입시 차선길이가 짧아 사고위험이 있으니 개선해 주세요."

4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발생

사고 유형

▶졸음쉼터 진입시 감속차로에서 시설물 또는 주차차량 추돌

▶졸음쉼터 진출시 가속차로에서 본선 주행중인 차량과 추돌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추돌

사고 사례

▶호남선 순천방향, 정우쉼터에서 과속진입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주차차량 후미 추돌('14. 5. 31.)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아포쉼터에서 본선 주행중인 차량이 졸음쉼터 가속차로 이용차량 후미 추돌('12. 10. 16.) 등

5

국민권익위원회·국토부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운전자의 민원에 귀 기울여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 시행 ('1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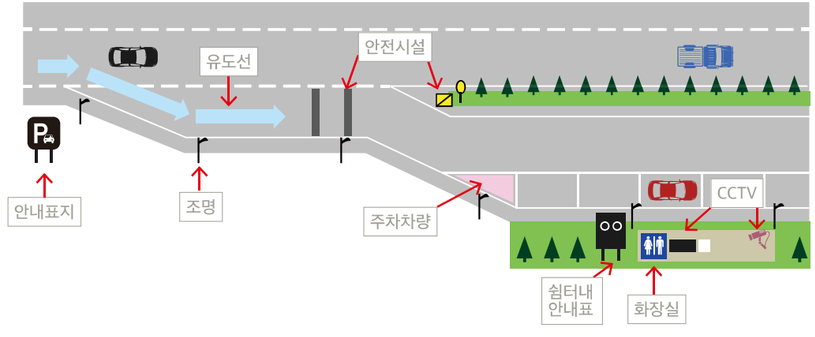
① 진 · 출입로의 짧은 가 · 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하는 한편,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

② 졸음쉼터 내에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도 확충.

③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

6

개선 모형



글. 노경희 | 사진. 김상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반부패·청렴의식이 유난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즘,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고 시책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도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는 이 청렴도 측정의 조사, 평가, 발표 업무를 전담한다. 2018년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준비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청렴조사평가과를 찾아가 보았다.

투명한 공직사회, 깨끗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렴조사평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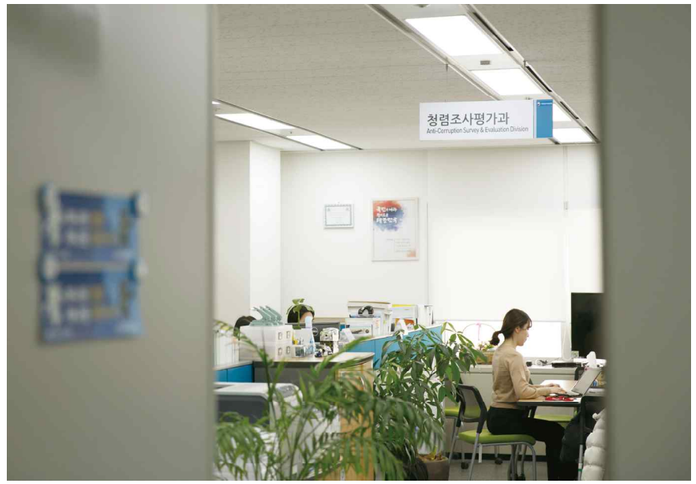
700여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로 청렴인식 높여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가 주 업무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0여 곳이 넘는다. 청렴조사평가과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시행해왔으며, 총 9명의 직원이 기관을 분담해 1년간 조사 · 평가한다.

이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업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다.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정책을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실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청렴조사평가과는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매년 12월에 발표한다. 그 결과가 각 기관을 실제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활용된다.

이 외에도 국민 · 전문가 · 기업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부패인식도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 공직자, 주한 외국



인 기업인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 인식과 공직사회부패 인식을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청렴도 측정을 비롯한 사업들은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과의 다양한 업무 추진과 노력들이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져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여성 직원 유독 많아 부드러운 분위기는 부서의 자랑

청렴조사평가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유독 밝은 분위기로 유명하다. 여성과 남성 직원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탓일까. 부서원들은 7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면밀하게 조사 · 평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꼼꼼하고 세심한 성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택 과장은 "빈틈이 없으면서도 부드러운 업무 진행이 필요한데, 여성 직원이 그런 면에서 우리 부서 특성에 잘 맞는 듯하다"고 전했다.
지난해엔 여성 직원 중 3명이 결혼을 하는 겹경사도 있었다. 직원들은 "청렴조사평가과에 오면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돌아 미혼인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웃었다.
오정택 과장은 "연말이면 1년간 조사평가한 결과를 정리, 발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며 "업무의 강도가 높아 힘들 때도 많은데,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렴도 측정을 비롯한 사업들은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청렴한지, 청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공공기관과 국민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려 한다.

올해 청렴지도 제작 지자체별 청렴도 '한눈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청렴조사평가과는 지난 16년간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탁비리, 신종 부패 등 부패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청렴도 측정 제도가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청렴조사평가과는 앞으로 측정의 가장 큰 목적이 각 기관의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여, 각 기관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초자치단체별 색깔로 구분한 '청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오정택 과장은 "어느 지역이 가장 청렴한지, 청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공공기관과 국민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오정택 과장은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은 경험이 있는 국민이나 일반인 350만여 명을 표본으로 해 27만 여 명에게 설문을 벌인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화설문이 오면 잘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렴조사평가과를 논하다

오승욱 사무관

"현재 36개 국 · 공립 대학교 등의 청렴도 측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 여간 온 힘을 쏟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만들어 발표하게 되면, 보람이 굉장히 커요. 10여 명의 직원들 모두 나라의 청렴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희 사무관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를 앞두고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였죠. 옆 동료가 함께 도와주고 신경써주지 않았다면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공용업무로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척척 도와주고 늘 힘이 되어주는 옆자리 직원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함께 파이팅해요~"

최지애 주무관

"국민권익위에서 일을 한지 벌써 10년차입니다. 부패인식도 조사를 담당하다보니 실제 부패 실정과 부패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느끼고 있어요. 국민이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시선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인데, 국민권익위부터 앞장서서 공직자 청렴 문화 개선에 힘썼으면 합니다."

정리. 편집실

소통은 유연하게 해결은 신속하게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약자, 현장, 체감' 국민권익위의 3대 핵심가치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인 동시에 그만큼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묵직함이 존재한다. 한데 매달 지역을 순회하며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해가는 활동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 기업고충민원팀이 실시하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전국을 찾아간다

국민권익위 기업옴부즈만 제도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옴부즈만 제도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매월 주기적으로 기업 고충민원을 논의하는 '기업규제 민원 점검회의', 소기업 · 소상공인의 긴급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업민원 적극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환영받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찾아가는 현장회의'라는 점이다. 매월 1회 이상 권역별로 순회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원을 발굴 · 해결하는 등 소외지역 경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 번째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동참해 즉문즉답으로 진행하는 회의 형식이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은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권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회의 성과의 바로미터가 되는 '인용률(해결률)'이 높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크다. 2014년부터 전국을 찾아간 현장회의는 2017년 12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1,689명의 지역 경제인

이 참여해 503건의 건의 내용을 접수했다. 이 중 194건의 민원을 해결해 인용률이 38.6%에 이른다.

경청하고 소통하고 해결하라

4년간 지속해온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는 수많은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가장 많이 제기된 건의 내용들은 생산제품 판로 지원, 진입도로 · 버스 노선 등 기업환경 지원, 기업 운영 자금 지원, 창업을 위한 입지 지원, 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금리 지원 등이며 영업, 환경, 설비, 자금 등으로 그 분야가 광범위하다. 이에 국민권익위 담당자들은 방대한 제도와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 유연한 제도 적용, 조사과정에서 부패요인 발굴, 더 나아가 제도 개선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현장회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는 담양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 인천 서구 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 조기 개설,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영덕지역 요양병원 외래환자 CT 촬영 허용, 충북지역 인력난 해법 도출, 서울 강남권과 단양 간 시외버스 노선 증편 등이 손꼽힌다.

물론 모든 민원이 해결에 이르는 건 아니다. 관련 제도와 법률, 이해관계 등 복합적이고 민감한 검토가 필요한 민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민권익위 담당자들이 민원을 대하는 자세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내 일, 내 이야기처럼 경청한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든, 사안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국민권익위는 공감의 자세로 경청하기에 허심탄회한 소통과 토론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반드시 향후 진행과정과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신뢰를 더해가고 있다.

더 많이, 더 넓게 퍼져가는 메아리

2017년 마지막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가 열린 제주도 서귀포시청.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표정에는 현장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어려있다. 올해 초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주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인력, 규제 등에서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다. 2017년 3월 중국이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 판매를 제한한 후 중국 관광객의 지출이 소매업종은 80%, 쇼핑업종은 78%나 감소하는 등 통계수치에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라도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싶은 이때 국민권익위가 11월 10~11일 양일간 제주지역에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하자 참석자들은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매출이 하락한 청주공항, 평택항 등의 면세점 사업자 임대료 인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어 참석자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져갔다.

서귀포 현장회의에는 숙박, 요식, 도소매, 인력, 특산품, 전통시장 등의 관광업을 비롯해 출판,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처음 접하는 현장회의에 어색하던 분위기도 잠시, 참석자들은 그간 끌어안고 있었던 고충들을 풀어놓으며 소통의 물꼬를 열었다. 이날 현장회의는 국민권익위의 권석원 심의관이 주재한 가운데 서귀포시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청, 세관, 영산강유역환경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상시중재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5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몇몇 안건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참석자들을 적잖이 놀라게 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민원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힘겹고 공허할 때가 많다.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며 반복적으로 고충을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률과 제도에 가로막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한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약자'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와 고충을 '체감'하는 낯설고도 반가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과정은 유연하고 해결은 신속하게 이뤄지기에 참석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목소리로 메아리를 주고받게 된다. 국민권익위 기업옴부즈만의 메아리가 더 많은 약자에게 더 넓게 퍼져가길 우리 모두가 응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 노경희 | 사진. 김오늘

지난 자리마다 청렴의 정신이 깃든 충청도의 청백리 흔적을 뒤따르다

논산, 명재고택

오늘날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한다. 이를 이끌고 유지하는 건 우리나라의 공직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청렴과 강직은 공직자상의 첫 번째로 꼽힌다. 일찍이 조선시대에는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상을 가진 공직자에게 '청백리'라는 호칭을 주었으며, 조선시대 총 217명이 배출되었다. 청백리정신을 계승하는 현재의 공직사회를 조명하기 위해 <국민권익>이 조선시대 청백리의 흔적을 되짚어 보았다. 그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청백리의 대표 고장 '충청도'다.

논산 명재고택

진천 외구마을

청원 기암서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 향한 배려, 실용적인 구조가 아름다운 공간

논산, 명재고택

노성산 자락에 남향으로 자리한 명재고택엔 현재도 13세 후손이 살고 있어 생활의 흔적이 역력하다. 1709년 윤증 선생이 죽기 5년 전 지어진 명재고택은 300년이나 흘렀어도 세월의 애틋한 흔적과 믿을 수없이 놀라운 과학과 철학이 조화로운 공간이다.
가옥의 구조와 배치, 섬세한 건축기법은 우리 옛 선조들의 건축적 지혜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대로 적선지가의 덕을 쌓은 윤증 선생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이 위기를 넘긴 것이다.

집안 곳곳 굶주린 마을 사람 먼저 생각한 건축기법

'백의 정승'이라 불리운 윤증 선생의 이웃을 향한 배려는 집안 곳곳에 묻어나 있다. 굴뚝을 낮게 해 밥 짓는 연기가 마을로 퍼지지 않게 했다. 먹을게 없어 배고픈 이들에게 '밥 짓는 굴뚝 연기'조차 혹여나 위화감을 줄 수 있을까 우려해서였다. 명절 무렵에는 주변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추수한 나락을 일부러 대문 밖 마당에 일주일 정도 놓아두었다.
이러한 배려는 300여 년 된 윤증 고택이 불에 타 사라질 뻔한 위기를 넘기는 힘이 되기도 했다. 한번은 동학혁명 때 동학군의 주둔지였을 때, 또 한 번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의 주둔지로 사용됐을 때라고 한다. 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받은 베품에 보답하기 위해 나서서 불을 끄고 방화를 말렸다. 대대로 적선지가의 덕을 쌓은 윤증 선생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이 위기를 넘긴 것이다.

집안 드나드는 손님 살뜰히 챙긴 배려심

외부로부터의 차단과 보호를 위한 담장과 문은 안채와 사당에만 설치했다. 집의 중앙부가 아닌 모퉁이 부근에서 안채를 둘러싼 담장은 겸손함과 더불어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선비로서 가지는 자부심이 잘 드러난다. 안채로 들어가면 먼저 벽이 나오는데, '내외벽'이란 이 벽에 가려 안채가 곧바로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만들어준다. 이 내외벽은 밑이 뚫려 있어 외부에서 안채로 들어오는 사람의 발이 보임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과 무엇을 준비할지를 집안의 여성들이 미리 알수 있도록 배려했다.

간소화한 제수품에 검소한 성품 드러나

명재 윤증가문의 특징은 백의정승 집안답게 실용적인 가풍으로 알려졌다. 유교 사회의 폐단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사의 허례허식을 개선해 제수품의 수를 줄였다. 명재가 집안의 부녀자들이 잦은 제수품 준비로 너무 혹사당한다며 간소화한 것이 지금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제사상에는 떡을 올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손이 많이 가는 유밀과, 기름이 들어가는 전도 올리지 말라하여 지금도 가문에서는 밤, 감, 대추 등 과일과 평소 먹는 음식만을 제사상에 올린다.

200년 간 42명 대과 급제, 종학당

명재고택이 가진 뜻과 시간의 가치는 고택에서 5㎞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종학당에서도 확인이 된다. 종학당은 임진왜란(1952~1598),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등을 겪은 직후인 1643년 건립되었다.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을 때 가문에서 나서서 나라일에 쓸 지역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곳의 기초를 잡은 이는 명재의 백부인 동토 윤순거(1596~1668), 윤선거와 명재가 차례로 학장에 오르며 명성을 크게 얻었다.
200년 간 42명의 대과 급제자가 이곳에서 나왔다. 파평 윤씨는 조선시대에 전주 이씨 다음으로 많은 과거합격자를 배출한 성씨로 기록되고 있다.
낮은 산 중턱에 지은 종학당 마루에 앉으면 맞은 편 멀리 윤창세, 윤전 등이 묻힌 문중 묘역이 내려다 보인다. 후손들은 자랑스러운 조상 묘역을 앞에 모시고 학문에 대한 자세를 다잡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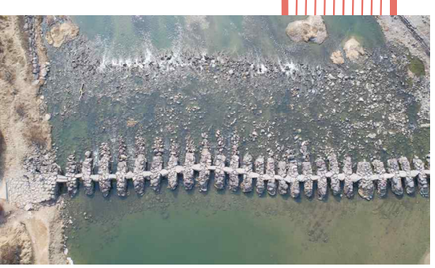
주소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
전화 041-735-1215

14번의 상소를 올려 벼슬을 사양한 모든 선비의 흠모의 대상

명재 윤증(1629~1714)

명재 윤증은 1629년(인조 7년)부터 1714년(숙종 40년) 사이에 살다간 조선시대의 학자로 호는 명재(明齋)이며, 본관은 파평인(坡平人)이다. 명재 윤증은 유계, 김집, 송시열 등 고명한 학자들에게 수학하였으나 아버지 노서 윤선거처럼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성리학을 공부했으며, 모든 선비의 흠모의 대상이 되어 '백의정승'이라 불리웠다.
1682년(숙종 8년)에 호조 참의, 1684년 대사헌, 1695년 우참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자 1709년(숙종 35년)에 임금이 우의정에 임명하고 사관을 보내 임명장을 전했지만, 14번의 상소를 올리고 끝내 사양했다. 1714년(숙종 40년) 병이 위독해지자 자손 및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내가 죽은 후에 선비의 예절로써 장사를 지내고 명정에는 내 관직을 쓰지 말고 작은 선비라 쓰라"고 엄히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1398년에는 개성유후사유후를 지내고, 태조가 그를 크게 신임함으로써 여러 차례 왕의 특사로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효행의 전통과 화합 상징
진천 외구마을 최유경, 사흥 효자 정려문

진천 문백면 구곡리 외구마을 동남쪽에는 지방유형문화제 제28호인 농다리가 있다. 농다리는 현재까지 아무리 큰물이 흘러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년을 이어온 다리'로 오가는 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농다리를 건너 외구마을 초입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최유경, 사흥 효자 정려문'이다. 이 효자정려문은 조선의 명신 최유경과 그의 막내아들 사흥의 효행을 기려 조선 1494년(성종 25년)에 조정에서 내려준 것이다. 최사흥은 어머니의 병환에 많은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달여 드리자 쾌차했다고 전해진다. 마을 주민들은 1,0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지역 문화유산 농다리 연계 전통체험마을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효행의 전통과 화합을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주소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임금에 충성하는 마음과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이 하늘까지 닿은 청백리

죽정 최유경(1343~1413)

1392년 조선이 개국하면서 이성계가 태조가 되었다. 조선의 건국에 공을 세운 개국 공신과 그 외에 작은 공이 있는 원종 공신의 공로를 문서에 적으려 할 때, 최유경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당시 임금인 우왕에게 고발하였으므로 공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태조는 최유경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높이사 그에게 개국원종 공신이라는 훈장을 내렸다.
최유경은 1395년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고, 1397년에 중추원 부지사로서 경기도· 충청도 도체찰사가 되어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다. 1398년에는 개성유후사유후를 지내고, 태조가 그를 크게 신임함으로써 여러 차례 왕의 특사로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1401년(태종 1년) 사헌부의 우두머리 벼슬로 종2품인 대사언이 되었으며, 같은 해에 참찬의정부사로서 명나라에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는 사신이 되어 다녀왔다. 1404년에 한성부판사에 이르러 늙었다고 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강백년의 위폐 봉안, 청백리 정신 깃든 충효의 도장
청원 기암서원

기암서원은 1699년(숙종 25년)에 강백년의 위폐를 봉안하고 세운 서원으로 1826년(순조 26년)에 오숙(吳熟)을 추향하였다. 1871년(고종 8년)에 철폐되었다가 1984년에 오창면 기임리에서 낭성면 갈산리 호평마을로 옮겨 다시 복원하고 갈산사라 이름 하였다. 갈산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겹처마의 목조기와집으로, 앞처마에는 갈산사라는 현판을 걸었고, 마당 앞에는 솟을대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다.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3길 15
문의 043-201-5031

강백년의 청렴함과 백성의 사랑함 임금도 감동해 칭송

설봉 강백년(1603~168)

강백년은 주로 삼사와 승정원에 봉직하면서 직언으로 정론을 폈고, 청풍군수, 강릉부사와 충청·황해·경기감사 등 외직도 두루 역임하였다. 강백년은 기질이 청명하고 행실이 단정하였으며, 효우가 돈독한 인물이었다. 그의 문장은 일세의 복종하는 바가 되었으나, 겸손하여 이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서는 반드시 대학을 한 번 외우고, 염락의 책들을 항상 몸에 지녀서 따로 이름짓기를 『한계만록』이라 하고, 심학의 중요한 말과 고금의 가언 선행 대학 8조목 등에 대한 견해를 펴서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경계하는 자료로 삼았는데, 항상 말하기를, "평생에 큰 허물이 없는 것은 모두 이 책의 공이다."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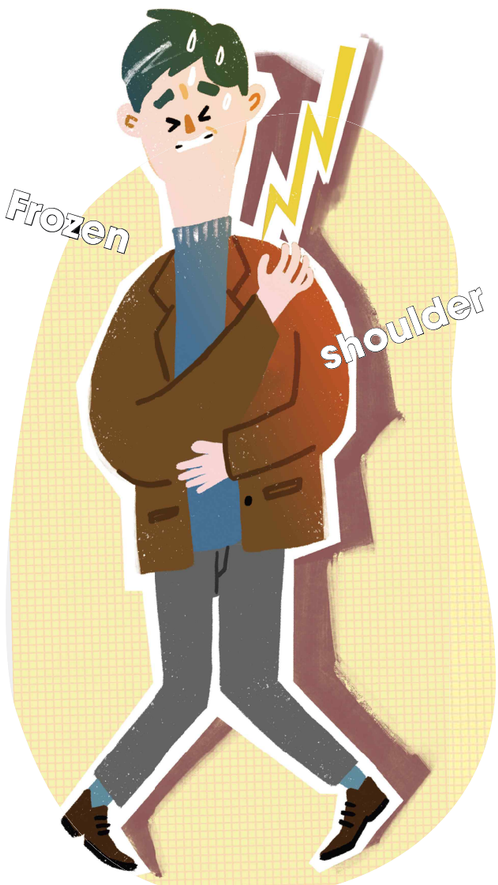
강백년은 기질이 청명하고 행실이 단정하였으며, 효우가 돈독한 인물이었다. 그의 문장은 일세의 복종하는 바가 되었으나, 겸손하여 이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정리.편집실

젊은 나이 불쑥,
나이 들면 만성

동결견(오십견)

최근 어깨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는 20~30대 젊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통 어깨관절 질환은 노년층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무직 직장인들이나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 어깨에 무리를 줄 만큼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젊은층에게서 어깨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결견(오십견)이란?

어깨통증 질환인 오십견은 5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퇴행성 질환인 만큼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어깨 사용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20대나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의 경우 오십견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오십견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어깨통증으로만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 생각해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또 동결견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힘들다. 동결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깨 전체의 통증을 들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팔을 올리거나 돌리면 어깨 전체에 통증이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어깨 근육이 굳어 팔을 올리려 해도 올라가지 않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아진다. 또한 어깨관절의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어깨 아플 때 도움이 되는 먹거리

생강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곱게 갈아 밀가루와 섞어 연고처럼 발라주면 다소 편안해진다.

식초 소금과 식초를 섞은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셔 어깨에 대주면 통증이 가라앉는다.

매화 혈액을 정화시켜 피로를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원인과 증상은?

오십견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은 관절막에 작은 외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 어깨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진 경우, 수술 후 장기간 근육이 고정되어 굳어진 경우, 당뇨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관절막에 염증 변화가 나타나고, 신축성이 떨어지면서 어깨관절의 운동성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증상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초기인 통증기, 그리고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인 어깨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 점진적 경직기, 마지막으로 오십견의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는 회복기의 3단계다.

통증기는 심한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지속되는 시기다. 특히 팔을 빨리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관절의 움직임에 조심하게 된다. 그러나, 통증을 느끼기 싫어 어깨관절의 움직임을 고정하면 고정할수록 운동 범위 제한이 심해진다.

점진적 경직기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어깨관절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제한이 심해지는 시기다. 따라서, 다양한 동작이 불가능해지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회복기는 어깨관절의 움직임이 서서히 회복되는 시기이다. 다만, 회복에 수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다.

효과적인 예방법

동결견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운동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어깨운동 제한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운동요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단단히 굳어버린 어깨 관절을 다시 원래대로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일정 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어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국내 의료기관 관계자는 "오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잘못된 자세 등으로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근막통증증후군이나 목 디스크를 어깨질환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오십견 등 어깨질환이 의심될 경우 꼭 전문의로부터 감별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편집실

이것만 알아두면 **나도 짠테크族!**

짠테크 분야별 활용법

바야흐로 '짠테크'가 대세다. 짠돌이와 재테크를 합친 말인 '짠테크'는 매일 조금씩 돈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짠테크'가 유행하면서, 커피나 담배를 줄이거나 택시비를 아껴 돈을 모으고 휴면 예금이나 보험금, 카드 포인트 등을 잊지 않고 알뜰히 챙기는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권익>이 생활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알짜배기 짠테크 전략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신용카드

절약을 위해서는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도 잘 살펴야 한다. 자신이 일 년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 우선공제가 된다.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섞어 써도 공제에 불리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카드 포인트를 찾으려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point.or.kr)를 이용하면 된다. 사이트에 들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10개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금으로 돌려 받거나 쇼핑할 때 쓸 수 있다.

보험해약 환급금이나 휴면 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보험해약 환급금과 휴면 보험금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각종 보험

보험해약 환급금이나 휴면 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보험해약 환급금과 휴면 보험금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 돈을 찾으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찾아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료도 무시 못할 부담이다. 자동차 종합보험료는 운전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결정되므로, 보험료 책정 기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보험설계사를 거치는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닌 다이렉트 보험을 선택하면 10~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2~3% 할인이 가능하다. 특약 사항이긴 한데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4~10% 할인된다.

자동차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짠테크를 방해하는 '요물'이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주유도 중요하다. 먼저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이동 경로에서 저렴한 주유소를 알아두는 것은 필수. 싼 주유소를 찾아간다고 멀리 돌아가면 오히려 시간과 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름값에서 손해 볼 수 있다. 차량 무게만큼 연료 소비량은 늘어나므로, 수시로 불필요한 짐이 트렁크, 차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 다음 빼고 다니면 좋다.

금융상품

짠테크가 이슈가 되면서 하루 단위로 돈을 납입하는 적금이나 펀드상품이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달애(愛) 저금통'을 내놓았다. 한달애 저금통은 자투리 금액을 모아 한 달마다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비대면 상품이다. 우리은행의 '위비 짠테크 적금'도 모바일 전용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1년 기준 최대금리는 연 2.3%다. 가입기간 중 매주 1000원씩 더 넣는 '52주 짠플랜'이나 한 달 주기로 매일 1000원씩 입금액이 늘어나는 '매일매일 캘린더플랜' 등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 입금된 실적이 있을 때 연 1.0%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만기는 1, 2,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앱(App)이 존재하지만, '짠테크'를 돕는 앱도 다양하다. 각종 음료, 음식 모바일쿠폰 할인판매 앱이나 문화공연, 여행티켓 판매장터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앱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면 1년에 수십만 원은 아낄 수 있다.

독자마당

2017년 겨울호에 대한
독자 의견입니다

0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국민권익을 제대로 찾아준 잘된 사례도 소개해주세요. 각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박숙희(강원 원주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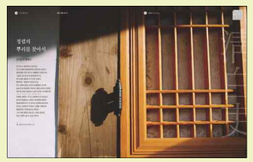
힘없는 서민이 기댈 곳은 어디일까 고민해보니, 국민권익위원회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민들도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해결한 사례 등이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서민의 눈물까지 보듬어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채은석(강원 철원군)

03

'청렴의 뿌리를 찾아서-경기도의 청백리' 기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청렴지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제부터 청렴한 삶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보리라 다짐해봅니다.

이시헌(인천 부평구)



04

건강 100세 코너 덕분에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 환자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대에 꼭 필요한 건강정보도 다양하게 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 관련 정보를 자세히 다루어줘 매우 유익합니다.

강구권(대구시 달서구)

05

'썩은 복숭아 찾기' 라는 제목이 특이해 가장 먼저 펼쳐본 페이지였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썩은 복숭아가 너무 많지 않길 바라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개선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백귀혜(전남 장성군)

권익위 열독왕 QUIZ?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정책활동 현장을 생동감 있는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블로그 기자단으로, 올해부터 ○○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들은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및 각종 행사를 직접 취재해 생산한 비주얼 콘텐츠를 블로그, SNS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위원회 홍보에 기여하게 된다. (힌트 : 26-27p 정책공감 코너)

지난호 정답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정답자 : 윤정호(전남 순천시) 이소원(제주도 서귀포시) 이상윤(충북 제천시) 강주찬(부산시 기장군) 이동현(서울시 노원구)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2018.1.15.~4.15.

신고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대상 예시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 **의약품 리베이트**
- **요양급여 부정수급**
- 그밖에 **의료 관련법 위반행위**